

<사회 : 이동원>

제2부 사회를 맡은 이화여대의 이동원입니다.

먼저 발표와 토론을 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에 계신 장필화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고, 토론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애실 선생님,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의 주준희 선생님, 서울대에 계신 최일섭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문제자체가 전부 중요한 만큼 모두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셔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 토론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필화 선생님 시작하시죠.

<발표 : 장필화>

1. 서 언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모두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기초하고 있고 특별히 남녀평등과 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정책이 어느 한 집단에게 허용하는 특권적 혜택이 다른 집단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여성정책에 대한 상이한 인식을 검토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일반적 국가의 성격을 논의한 지난 30여년간의 한국의 여성관련정책을 몇가지 예를 들어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각 논의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이 생략되고 개괄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여성정책에 대한 두가지 인식

여성정책은 우선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됨이 당연하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어떠한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별도로 요구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이다. 둘째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앞서 논의한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거하고 있다. 이 두 인식은 출발점에서도 다르고 과정에서도 갈등과 긴장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첫째의 판단은 여성의 입장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다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수단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여성이란 모든 여성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선별된 여성들이다. 예를 들자면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보다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미혼여성 집단, 또는 80년대에 와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이 노동시장에의 도입을 권하게 되는 30대이후의 기혼여성 등으로 그 목표에 따라 선별되는 대상이 달라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번째의 판단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강화하여 명실공히 평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위한 정책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합목적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책에 해당되는 여성은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이념을 갖고 있다. 아직은 이런 합목적형 정책이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인권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합목적형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목표로서 분리적인 목표라는 인상을 주기 쉽고 따라서 폭넓은 지지를 받는데 약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수단형 정책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유포된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합목적형 정책은 여성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사회전체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논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의 하나는 기존의 정책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합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합목적형 여성정책은 이제까지 정의롭지 못한 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여성들의 위치를 회복시킴으로써 정의를 회복하고 그것이 곧 전체사회의 공정성의 향상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첫째 국가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개발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지난 30여년간의 한국정책을 통하여 정책의 성격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정도는 궁극적으로 그 국가의 정의실현에 대한 결단적 의지와 제반 제도에 달려있다.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에 내재해 있는 편향적 경향은 그 의지와 제도에 대한 강한 회의를 갖게 하지만(조형, 이재경; 1989) 여기에서는 여성의 위치에 대한 국가의 성격에 대한 일반론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3. 공·사영역 분리와 여성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한 국가론과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는 정치현상에 대한 엘리트론, 자유주의 다원론, 네오 막시스트 국가론 등으로 그 접근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으로 규정하고, 또한 물성적(asexual)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근대국가의 서구적 원형은 봉건 절대왕권과 신분제 사회질서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자유주의 사회사상의 상호협력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새로운 개인관은 이 둘을 묶어내는 초석의 역할을 한다. 즉 공적권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사적영역(privacy)의 권리를 가진 개인관은 국가가 개입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하는 시장주도적 자유방임주의적 국가관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는 제반 사회, 문화구조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의회제도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과정이란 곧 공적이라고 인정받는 절차를 통해서 합법성을 주장하고 합법성을 가진 법규는 개인에게 강제성을 떨 수 있다는 믿음이 정착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이러한 절차와 법률로부터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소중한 개인의 영역이다. 공사영역의 구분은 보다 더 철저히 정교화되어 공적인 영역은 다양화, 확대, 전문화되는 반면에 사적인 영역은 분리, 축소되면서 원자화되었다.

이러한 설명은 여성과, 여성이 일차적으로 동일시되고 있는 가족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개인관은 여성을 포함하지 않는 남성시민의 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 사회, 국가간의 계약적 관계의 개념은 물성적 개념이 아닌 남성적 개념이다. 둘째로 가족은 동등한 인권을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남성가장에 소속되고 가장에 의해 대표되는 부속집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사적영역으로 규정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시민혁명이전의 전통적 가족개념을 그대로 전승하면서 오히려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더욱 확대, 강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필화; 1987).

다시 말하면 여성에게는 충분히 개인의 개념이 적용되기 보다는 남성가장에 의해 대표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규정된 것이 역사적 과정이 남겨놓은 중대한 한계라고 볼 때, 여성의 인권회복과 가족관의 재정립은 역사발전에서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또한 공사영역에 대한 재정의와 개인, 사회, 국가의 연관관계에 대한 근본적 사고의 변혁없이 성취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4. 여성관과 가족 관련 정책

이러한 거창한 과제의 첫 걸음으로 우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국가의 여성관을 가족 관련 정책의 존재와 부재를 통해서 검토해 보자. 구체적인 질문으로 여성은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특정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즉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수행에 필요한 인내심, 가정에 대한 복종 등과 같은 성격을 전제하고 있는가. 혹은 양육은 남녀 모두의 그리고 사회의 책임이고 수행해야 할 과제로 보는가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여성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 또는 잠재적인 노동자로 보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고, 그것은 곧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Ruggie; 1984).

어린이 양육

여러가지 자료를 종합할 때 국가의 여성관은 일차적으로 가정내의 역할을 규정하고 제반 사회조직은 이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양육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 이를 강력하게 예시한다. 정책의 부재상황은 어린이의 양육책임을 여성에게 전적으로 맡기며 이것을 사적인 영역안 가족단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적절한 환경에서 적절한 양육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사회구성원이며 이들의 특성상 사회는 이 특수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특수집단과 달리 어린이집단은 그 사회의 미래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자원에 대한 투자의 의미를 지닌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를 누가, 어떤 자원으로 제공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공적인 절차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생략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국가는 만 6세이상의 어린이에게 6년간의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외의 서비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출생에서부터 취학까지, 또 국민학교 수업시간 이외 시간의 어린이 양육문제에 대한 제도를 따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린이 양육문제를 사회적, 공적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가족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책임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수년간 확대된 탁아시설은 어린이 양육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한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수단형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정현숙; 1989). 논의되고 있는 탁아입법의 문제도 그 입법 취지에 있어서 어린이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라는 시각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가사노동은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 (김애실: 1988). 또한 가정내 폭력에 대한 공권력은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부부간의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구타당하는 아내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온다.

가족계획정책

지난 30년간 현시적 가족관련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가족계획정책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책상 여성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중된 유일한 정책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여성은 출산자로 인식되고 경제발전에 부정적 역할을 하는 출산력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정책의 집행과정은 중앙집권적 정부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얼마나 치밀한 조직력과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가장 사적인 임신과 출산의 영역에 침투하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배우 가임여성의 피임 실천율은 1960년의 9%에서 1987년 72%로 획기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미경: 1989).

이 정책은 그 과정에서 여성을 주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의 주체로서 여성 각자의 자결권에 대한 배려보다는 건강, 출생을 감소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단산위주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피임방법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여성에게 제공했다는 점은 여성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반수 이상이 평균 2.2회의 인공유산을 경험했다는 사실만 보아도 예방적 피임 뿐 아니라 임신중절을 피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아 이러한 정책은 입법화된 모자보건법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는 여성의 출산결정이 여성 스스로에 있다가 보다 남아선호사상을 유지하는 가족구조에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잘 기른 딸

하나가 열 아들보다 낫다”는 표어로 바뀌어 가는 변화를 볼 수 있다.

5. 성 관련 정책

성 관련 정책을 법률에서 찾아보면 주로 형법에서 나타난다. 정조에 관한 죄, 윤락행위 방지법, 간통죄 등을 볼 때 특정한 경우와 특수한 여성집단의 경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각각은 최근에 들어 연구와 법개정 작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특히 정책의 부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의 한 연구가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여성은 계층이나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폭행의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높은 비율의 여성이 성폭행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다 (심영희: 1989). 더우기 경찰관계자들 간에는 수년간 강간과 연결되지 않는 단순절도범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성폭력은 성의 상품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미하다. 향락업소와 매매춘의 증가, 음란 서적, 음란 비디오의 불법적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소탕작전만이 있을 뿐 근본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접해 볼 때 몇가지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 사법절차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력에 관한 일반적 통념과 이중윤리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 유발이나, 피해자의 순결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에 접근한다 (김선영: 1989). 또한 법절차 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는 성폭력에 관한 규정은 가해자에게 극히 관용적인 결과를 갖게 한다 (박선미: 1989).

권력엘리트들의 성의 상품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의 중요요인은 이들이 남성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남성 권력집단은 상품화된 여성의 실제, 또는 잠재적 소비자집단으로서 정책설정에서 모순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매매춘에 관한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답변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입장이 잘 드러나고 있다 (장필화, 조형: 1990). 한국 여성의 상품화를 국가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자

는 방안과 제의가 버젓이 논의되는 것은 수단형 정책의 가장 극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사물화에 대한 우려에서부터 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나 현재의 임시위주교육에서 성교육을 위한 시간이 할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비록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청소년들에게 이중윤리를 더욱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짙다.

오늘을 사는 남성들의 성문화를 분석해 볼 때 성 관련 정책에서 합목적형 정책의 출현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에서 예시한 정책의 부재상황은 성이란 가장 사적인 영역이라는 기존의 관념 때문에 간과되고 합리화되기 쉽다.

6. 일 관련 정책

그동안 가시적 정책으로 표면화된 대표적 정책은 임금노동에 관련되었다. 경제 성장정책에서 한편으로는 인력개발의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집단의 통제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 관련 정책에서 여성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인력개발 직업훈련

1967년 신설된 과학기술처는 과학과 기술인력이 대학과 실업고등학교에서 집중되도록 투자를 촉구했다. 이 계획에서 실업고등학교는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67년 이래 공립 기술훈련원의 확립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의 차관을 얻어(UNDP, ADB, IBRD 등) 착수되었다. 여기에서 집중된 것은 종래의 남성적 기술로 이해되는 용접, 선반공을 비롯한 금속, 목재가공, 전기, 전자통신 등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훈련투자의 대상은 남성들이었다. 여성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보면, 명목상으로는 이러한 훈련기회가 남녀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주변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정책입안자들의 취지는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 80년대에 와서 70년대의 투자대상이었던 남성기술자들은 어디론가 옮겨가고 기혼여성들이 이런 기술을 가진 노동자로 대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 직업훈련의 증가로 말미암아 여성훈련의 비율은 1966년의 17.3%에서 1980년대에는 5%정도로 축소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비율은 작업장 훈련(OJT)과 사립학원에서 높게 나타난다. 판립학원의 경우 여성은 여성적 기술로 인정되는 작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까지도 훈련투자대상으로서의 여성은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갖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은 성별분업에 대한 고정관념과 기술에 대한 남성적 정의를 극복할 때에만 효과적일 수 있다 (김미주; 1989).

노동운동

70년대 초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이 주도했고 이때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정책은 곧 바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도 노동운동의 통제권은 공권력이 자본주의 입장을 옹호하고 노동자집단의 입장은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더 분석되어야 할 점은 여성 노동자집단인 경우 그 억압의 정당화와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의 탄압과 통제과정에서 이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이용한다. 여성은 배운 것이 없고, 조직활동에 무지하고, 기껏해야 외부세력에 의해서 조종이나 당하는 열등한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여성관을 적절히 이용한다 (신인령; 1985, 조순경; 1989).

1988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우리사회의 합목적적 여성정책에 가장 근접한 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이의 제정과정과 실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여성정책 입안과정에 상당히 큰 시사점을 던지리라 생각한다.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정책의 개념과 그 현실인식과 목표의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개괄적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과거 30년간의 대부분의 여성에 대한 정책은 수단형 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가부장제로 일컬을 수 있는 전통적 사회질서의 맥락에서 집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공사영역의 분리개념과 여성의 위치를 일차적으로 가족에 두고 있는 전통적 사고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인권회복의 차원에서 볼 때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공사영역 분리개념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책은 가족, 성, 일의 사적영역에 깊숙히 침투해 있다. 이러한 개념과 실제상의 괴리상태에서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한 합목적적 여성정책은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여성은 일차적으로 사적영역에 속한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남성이 주도하는 공적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정책은 부재하게 된다. 여성을 일차적으로 가족영역에 귀속시키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리의 개념을 극복한 여성관의 재정립이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남녀 모두를 일차적으로 사회적 생산노동자로 규정하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특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여성관과 일차적으로 여성을 가정적, 의존적 존재로 규정한 다음 여분의 인력이 사회노동 참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는 여성관은 결과적으로 여성정책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서구사회의 비교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나타난다 (Ruggie: 1984). 결국 진정한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여성관의 정립과 현재 정치, 경제,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은 여성에 대한 정책만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그리고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에 의한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미주 (1989), "노동과정을 통해 본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사례연구" 이대 석사논문
-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김애실 (1988), "노동공급에 관한 신고전경제학에서 본 가내성별분업", 『한국여성학』 제4집, 한국여성학회.
- 박선미 (1988),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신인령 (1985), "한국의 여성노동문제", 박헌채 외, 『한국의 자본주의와 노동문제』, 서울:돌베개
- 심영희 (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명선 (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대 석사논문
- 이미경 (1989), "한국농촌여성의 피임 결정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이대 석사논문
- 장필화 (1987), "여성의 사회적 위치: 일, 가족, 국가와의 체계적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여성학』 제4집, 한국여성학회
- 장필화, 조형 (1990), "국회속기록을 통해 본 여성정책 시각-매매춘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 연구소 지원 연구논문
- 정현숙 (1989),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탁아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6집, 한국여성연구소
- 조순경 (1989), "여성노동과 성적통제", 『한국여성학』 제5집, 한국여성연구소
- 조형, 이재경 (1989),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여성학논집』 제6집, 한국여성연구소
- Ruggie, M. (1984), *The State and Working Wom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사회 : 이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필화 교수께서는 수단형 정책과 합목적형 정책이라는 두가지 틀을 놓고, 우리 국가의 여성관은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여성을 가정내의 사적영역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성정책은 거의 수단형 정책에 머무르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입장을 벗어나서 여성의 인간회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관 자체의 개조를 통해 하나의 합목적적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애실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경제학적 시각이 다소 가미되겠지만 종합적 차원에서 토론해 주실 것입니다.

〈토론 : 김애실〉

우선 장필화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여성정책이라 할 때 항상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활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을 도구화하는 수단형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성인력의 개발, 활용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으로 읽었고 학생들에게도 이 논문을 권하고 싶습니다. 장교수께서 우리에게 여성정책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여성정책 30년을 점검해 볼 때 여성을 도구화하는 수단형 정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여성노동력이 필요하므로 남성의 일자리를 메꾸어가는 정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주신 것은 중요한 기여로서 여성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목표를 제시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장교수님의 논문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가 90년대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합목적형 정책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분야별로 제안하지 못한 점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노동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장교수가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1차적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2차적 노동력으로 보는데 여성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우선책임은 가정에 있고 그 다음에 남성보조적인 2차적 노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성은 그동안의 경제발전계획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도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2차적 노동력인 여성을 1차적 노동력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많은 남성이나 여성들은 누가 가정을 지키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교수님의 논문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타아문제를 제시하면서 장교수님은 여성이 직장생활을 할 때 타아가 문제되므로 타아입법,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 합목적형 정책은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타아정책이 합목적형 정책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의 모든 좋은 것 — 직위, 직업, 경제적 위치 — 은 모두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 취업구조면에서 전문직은 거의 남성들이고, 임금이나 숙련도가 높은 곳도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형성하느냐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여성학, 여성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은 여성이 소외계층에 속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적, 제도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가 모두 문제가 된다면 정책적으로도 이 두가지가 모두 제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두가지 문제, 즉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왜 여성이 차별당하는가, 그리고 의식구조면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취업구조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저는 관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관료제도가 행정관리 뿐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여성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일반기업체가 여성, 특히 고학력 대졸여성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채용할지라도, 승진기회를 주지 않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기업과 관료사회의 관계로서 바로 이것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능력있는 사람이란 좋은 학교를 나와서 거래하는 관공서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즉 일의 능력 보다는 학력, 연고지를 중시하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경유착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90년대의 정책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탁아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학력여성의 취업은 관료제도가 문제인데 관료제도는 고시제도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료엘리트는 고시를 통해 뽑았는데 앞서 오전 토론에 나오신 분이 재작년부터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남녀구별을 없앤 이후 여성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금년에는 30%까지 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9급공무원의 경우이고, 9급공무원이 정책결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남성들이 독점하는 고위행정직은 고시제도를 통해 고시엘리트의 탄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자부심과 사회의 인정으로, 우리사회가 구조적으로 관료를 숭배하는 체제에 몰들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90년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저는 고시제도의 철폐를 주장합니다. 일제시대에 시작된 고시제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고급관리 전문직을 충원할 수 있고 이 방법은 여성에게도 훨씬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

을 하면서 접해 온 고시공부하는 학생은 거의 남학생으로, 고시는 여학생이 할 수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4년을 고시에 매달려 공부하지 않고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문교, 보사, 노동행정의 훈련을 받으면 얼마든지 5급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대학의 전공에는 性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붙어는 여성학이고, 경제학은 남성학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시공부는 남성위주로 되어 있어 여성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직에 여성이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문제에 있으며,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학력여성의 취업문제에 있어서 장교수는 합목적적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수단적 방법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며 말씀드리면, 여성인력의 정책은 여성인력의 수요, 공급을 촉진하는 두가지 정책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인력의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은 작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함으로써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남녀차별 관행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업체들은 관행적으로 법을 피해서 남녀를 얼마든지 차별임용할 수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여성인력의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관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된 인습, 편견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을 개혁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은 결국 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 20~30년 동안 여러 정책을 논의하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정책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성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여성 스스로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 이동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치학을 전공하신 주준희 선생님께서 정치학적 시각에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 주준희〉

여성학을 전공하신 장교수님이 여성의 공·사영역에 입각해서 여성정책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고,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소위 여성정책을 다루면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천만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중에서도 고통받고 소외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정책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아닌가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을 볼 때는 전문적 연구와 전문가가 부족하고, 정책의 형성과정도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여성정책이 전문가들에 의해 심각하게 연구되고 우리 2천만 여성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근본적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교수께서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많이 배웠고 부분적으로는 장교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념적, 이론적으로 몇가지 비판할 점이 있고 또 가장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즉 자본주의적 편향 급진주의적 시각이라든가 공·사영역의 개념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자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서 대화를 나누기는 불가능하므로 요약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에 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두가지 생각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교수의 논문에 대해 저는 교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

는 정책이 여성정책인가? 아동양육, 성 관련 정책, 일 관련 정책 등 이런 사회정책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면 여성정책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여성정책이라 부른다면 여성정책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여성정책이란 여성을 대상으로 형성되고 집행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동양육이 왜 여성정책인가? 장교수님 말씀대로 아동양육은 남성이나 사회가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가족계획이나 성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수님은 여성의 사적영역화를 공격하면서도 문제선정에 있어서는 장교수님 스스로 고정관념에 젖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양육, 가족계획은 사회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6차 경제개발계획에 여성부문이 포함되면서 현재 여성정책이라 할 때는 대상별로는 윤락녀, 미혼모, 모자가족, 취업여성, 서비스직 여성, 가정주부, 중산층, 저소득층 여성, 농촌·도시여성에 대한 정책이 있고, 기능별로는 여성에 대한 교육, 가정, 건강, 복지, 사회참여, 고용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성정책의 구체적 측면을 검토함으로써 구체적인 합목적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면의 제한성은 인정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와 남성의 오류를 지적,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올바른 여성정책의 형성, 집행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자성도 필요합니다. 즉 남성, 국가에 대해 피해관념적 시각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이 어떻게, 어떤 철학으로 — 무엇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나 하는 시각에서 —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장교수님과 저의 시각이 불일치하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성정책은 여성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 냉엄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화되어 효율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점진적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지 급진적 이상론, 페미니즘적 유토피아에 입각해 정책이 형성, 집행될 수는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됩니다. 장교수님은 수단형, 합목적형 정책을 구분하여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법의 흑백논리는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목적형 정책이 좋고 그것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수단형이라 비판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집행과정에서 관료주의나 정책엘리트와 관료집단의 수단형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합목적형 정책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령 수단형 정책도 합목적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장교수님의 이분법적 논리가 현실정책의 형성에 뚜렷한 지표를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장교수님은 공·사영역의 再定義와 개인, 사회, 국가의 연관관계에 대한 근본적 사고변혁에 여성정책이 입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여성정책이 그런 것에 입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국가의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올 때 정책형성에 필요한 지적능력이나 자료수집에 지나친 부담이 오게 되고 또 다른 가치문제로 인한 사회의 갈등, 분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공·사영역의 이론과 여성학의 유기적 관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 해도 공·사영역이 통합되면 사적문제 — 성, 가족, 아내학대, 아동학대 — 는 공권력이 개입되어 공적으로 해결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정책적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여성과 남성이 동반자로서 서로 돕고 아이들의 양육을 사회가 맡는다는 공·사영역의 통합이라는 페미니즘적 유토피아가 그럴듯 하기는 하지만 역사상 모든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실천과정에서 상당한 모순과 혼란, 고통을 야기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즉 공·사영역이 복합되는 정책이 현실에서 실행될 때에는 관료화의 부작용, 인간이 정책을 집행하는데 따르는 부작용 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데 대해 정부의 공권력이 일일이 개입한다면 얼마나 많은 관료화에 의한 부정부패가 생기겠습니까. 물론 공권력이 정의롭다면 가정문제 등의 사적영역에 일일이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주의적인 공적권력이 사적영역에 침입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 많은 영역에서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적 유토피아나 사회주의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사회의 구조악이 해결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설사 구조가 변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로 이전된다고 해서 여성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영역이 통합되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가장 부정적인 공사영역의 통합을 생각해 보면 아주 무능하고 나약한 남성과 아주 거칠고 공격적이고 무뚝뚝한 여성이 아이를 탁아소에 맡기고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쁜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이데올로기가 정책이나 현실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가 되었을 때, 구조악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인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양육이 사회문제, 사회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습니다. 저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자기 개인의 권력과 개인의 지위를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이혼도 불사하고 그러한 사회에 — 저도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를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무엇이 상위의 가치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교수님은 여성을 사회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로 정의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러한 유물론적인 인간관계에 절대 반대합니다. 여성은 노동자일 뿐 아니라 사랑하는 인간이요, 생각하는 인간이요, 삶을 개척하고 구축해 나가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을 박애노동 정도로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에 있어서 남성이 공적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월한 것이고 여성이 자기의 영역을 다 벗어던지고 공적영역에 통합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 어머니로서의 —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여성으로서의 —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비하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활동이 공적영역에서의 남성의 활동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서 출발해서 남성과 같이 되는 것이 곧 여성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은 남성들이 하는 일 못지 않게 가치있고 훌륭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옹호, 발전시키고 여권신장을 주장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 하는데 있어서도 여성들이 모두 공적영역에서 아이는 탁아소에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보다는 취업하고 싶은 여성은 자유롭게 평등하게 취업할 수 있고, 또 가정의 안정과 사랑을 중요시하며 가정에 남기를 원하는 여성은 그 여성 나름의 가치가 존중·옹호될 수 있는 그러한 여성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문제 — 가족폭력문제에 공적권력이 개입해서 이것을 여성정책화해서 다루는 것에는 부정적인 문제점도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는 바람직한 여성정책이란 급진적 이데올로기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기 보다는 역사적 현시점에서 우리 여성이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시적이고 급격한 처방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세분화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치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본적 입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책형성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 및 그 과정의 합리화입니다. 현재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로는 정무장관(제2)실, 여성개발원, 청와대 대통령 여성문제 담당 비서관, 각 정당 여성국의 조직체와 과정이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 중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성정책 담당기관에 자격을 갖춘 인재의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성현실을 연구해야 하고 어떠한 정책이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누가 그러한 전문가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격있는 인력을 충원, 양성해야 하며, 그들이 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여성문제 정책전담기구의 관료화현상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바탕에서 충분히 연구되어 제안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지, 필요한 정책을 빨리 연구해서 언제까지 작성해서 내라는 식의 위에서 하달하는 방식으로는 이제까지 나왔던 주먹구구식의 단기적인 여성정책 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 자율성의 보장, 인력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관료화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여성정책 형성기구 자체를 정기적·조직적으로 구상, 평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박사님의 한국여성정치연구소나 여성정치문화연구소, 기타 여성단체 등의 차원에서 정부의 여성정책이 어떠한 철학에서, 어떠한 이론에 입각해서, 어떠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 이동원>

감사합니다. 여성정책을 전공하신 분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시각적 차이를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재미있는 토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최일섭 교수님께서 특히 유일한 남성으로서 남성학적 시각에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 최일섭>

세 분들이 충분히 발표와 토론을 해주셔서 제가 별다르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정치하고 종교문제는 될 수 있으면 토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말하지만 거기에 제가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있는 데서 여성문제를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필화 선생님의 발표와 주준희 선생님의 토론을 보니, 주준희 선생님이 장선생님의 발표를 오히려 더 양극화시켜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장필화 선생님의 논문이 여성정책을 위한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시각

을 내놓은 것은 아닌데, 주준희 선생님이 장필화 선생님의 논문에 그러한 인상을 부여함과 동시에 급진적인 것을 절대 반대하는 시각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장필화 선생님이 급진적·변혁적인 시각을 가지고 — 평소에 두 분이 아서서 그럴지는 몰라도 — 있는 것 처럼 보였는데, 제가 읽기로는 이 논문에서는 그런 급진적인 시각이 조심스럽게 피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논문과 관련하여 보면, 수단형과 합목적형, 이 둘은 어떻게 보면 구별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다지 구별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수단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여성정책이나 여성관련정책이 수단형적이었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합목적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최측으로부터 특히 가족계획과 남녀고용평등법 부분으로 논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족계획정책 부분을 이 논문에서는 약 한 페이지 정도 다루고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한 장선생님의 이해는 저만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실을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정책도 이 논문의 구성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수단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렇게 표현한다면 저는 오히려 합목적형에 더 가까운 것이 가족계획정책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가족계획정책이 시작될 때 국가적 차원에서는 당시의 인구성장률이 연간 3%의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사실상 가족계획운동을 일으킨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부가 민간지도자의 전의를 받아들여서 가족계획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계획운동을 일으킨 민간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인구의 조절 측면 뿐 아니라 여성지위향상에 대단한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면, 7페이지에 나와있는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보다 낫다”는 표어는 원래는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입니다. 70년대 말부터 이러한 시각이 나온 것은 아니고, 70년에 만들어진 표어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이 표어에서 사람들이 흔히 잘 틀리는

것은 딸, 아들의 순서문제로서, 이것을 사람들은 보통 아들, 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표어를 만들 당시에 딸을 앞세운 것은 남아선호사상을 없앨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알맞게 낳아 잘 기르자”가 1960년대 표어라면 1970년대에는 이미 남아선호사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1970년대 말에 이르러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은 사양산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에는 인구증가율이 1%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를 더 줄이자는 주장은 명분이 없어져, 이제 가족계획사업은 점점 모자보건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고 청소년의 성교육 문제를 강조하는 식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수단형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히려 가족계획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합목적형 여성관련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으로 실시된 지 이미 2년이 되었습니다. 여성의 근로권, 취업중의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이 2년동안에 완전히 정착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선생님의 글에서도 이 법의 제정을 합목적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지만, 남성 입장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에도 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라고 봅니다. 법이 제정된 후 지난 2년동안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한국여성개발원이라든지 기타 여성단체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나타난 광고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가를 보는데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래로 어느 정도 향상이 있었던 것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숫적으로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집분야라든지 채용과정 등에서는 성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만을 뽑는다고 — 법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 해놓고 용모가 단정한 여성, 미혼여성 등의 조건을 붙여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차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로 보기에 완화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개선이 없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운용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남녀고용평등법은 제정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띄는 변화를 바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가족계획 문제, 남녀평등고용 문제 등 여성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전 제1부에서 양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양적이든 질적이든 그 근본적 전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없이는 곤란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법, 제도,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의식을 고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을 온전히 지키기를 바란다면 역시 의식을 고쳐야 합니다. 오전 1부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후에는 이런 종류의 지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자신들의 의식부터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일에 대한 확고한 동기, 적극적 자세 등이 남성들에 비해서는 역시 아쉽지 않나 하고 말씀드린다면, 어렸을 때부터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을 교육시킨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실텐데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성들 스스로 일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들이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학을 선택하고, 대학 진학 다음의 학과선택도 자아실현, 사회봉사적인 것 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상당부분 고쳐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의 태도, 즉 딸에 대한 부모의 태도라든가 아내에 대한 남편의 태도, 자매에 대한 형제의 태도 등은 물론 여자의 역할이 가정을 지키는데 있다고 보는 유교적 고정관념 속에서 형성되어 왔는데,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지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실천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남녀간의 주종적인 성역할 관계,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훨씬 이전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가족계획을 예로 들었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남녀의 건전한 성관계, 특히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는 만화를 만든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실제 시범사업으로 했고, 이런 한국의 사업은 국제적으

로도 인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자라서는 학교교육에서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고용주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 무슨 복지기관도 아니고 여성평등을 주장하기 위해 기업을 만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주들은 여성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에 큰 이익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손해는 되지 않는 정도의 보장을 바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여성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을 통해서 기업들과의 이해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오전 토론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할당제, 쿼터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 전 여성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보낸 저널을 가끔 읽어 보면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쿼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훈대상자라든지 또는 장애자를 위한 쿼터시스템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지만, 여성의 쿼터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 감히 이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쿼터제도 역시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여성을 둘러싼 여러가지 체계 즉 여성자신을 둘러싼 가족, 학교, 사회, 기업,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점진주의적 접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점진주의적 방법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남아선호관념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 계몽, 교육같은 것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쿼터시스템은 상당히 급진적인 제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 이동원>

시간이 충분할 줄 알고 오늘은 사회를 좀 느긋하게 보고 있었더니, 토론자들께서 너무 열띤 토론을 벌이시는 바람에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청중들에게는 종합토론시간에 시간을 드리고, 여기서는 장필화 선생님에게만 마이크를 돌리고 끝맺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김애실 선생님이 제기하신 구체적으로 합목적적인 입장에서 탁아정책은 어떤 것일가의 문제, 주준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시각을 달리하는 입장, 즉 지나치게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적인 이상론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공·사영역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과연 문제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최일섭 선생님이 주준희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다소 현실에 기반한 점진적인 정책이어야 된다는 말씀, 대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선생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장필화>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 논문에 대해서 상당히 보충을 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글을 좀 더 확인하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아정책에 관해서 김애실 선생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최근에 탁아입법에 관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서 충분히 논의하기가 어려워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일년여 동안 작업한 결과가 나왔고, 민자당에서도 어제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앞에서 제가 힘주어 이야기하고자 했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아동관 즉 아동집단을 아동집단 나름대로 특수

한 요구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이 사회 공동의 요구에 응하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맡는다는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한가지와, 또 탁아입법 같은 것을 전체 사회복지라는 필요한 욕구집단들에 대한 사회복지 중에서 아동복지에 속해있는 것으로 일단 규정하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고 있는 절박한 문제인 빈곤층 아동을 목표집단으로 우선 설정하면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탁아입법은 철학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사회복지의 하나로 보고, 전략적인 정책목표집단으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탁아입법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탁아연합들이 활발하게 벌여온 입법운동은 빈곤층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 논의도 빈곤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문제가 빈곤층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 여성들이 더 심각하셨겠지만 — 저도 아주 심각하게 육아와 일을 어떻게 공존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6개월, 1년된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다니기도 했고, 강의실에도 데려가 보는 경험도 많이 해 보았는데, 빈곤층은 아니었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무직, 전문직 기혼여성들도 매일매일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탁아문제가 단지 빈곤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탁아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여러가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탁아소 뿐만 아니라 직장단위에서의 탁아소의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탁아문제를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면 자꾸 정부재원만을 단위로 생각하게 되는데, 기업과 민간의 자본참여를 권장하는 쪽으로 입법정책화 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탁아소, 직장 탁아소 등이 공·사영역의 구분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은 가정과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직장에 아이가 와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오히려 직장은 더욱 인간적인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준희 선생님의 논평은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혼동을 느꼈습니다. 주준희 선생님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논평할 기회를 주기 위한 생각으로 말씀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동안 주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종류의 비판을 많이 접해 왔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의 역할 —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얘기하던 금방 여성은 가정을 뛰쳐 나올 것이라고 하고, 어머니로 여성을 규정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하면 금방 어머니는 아이를 버릴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 보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가정이나 어머니에 대해 상당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성을 일차적으로 어머니로 규정하자는 것은 여성이 가진 어머니로서의 identity를 없애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의 공·사영역의 분리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적인 영역에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주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저도 공권력의 투입을 요청하는 식의 정책입안이나 결정을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모든 사적영역의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보다는, 일단 이런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의 개념에 대해 생각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90년대에서 200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성정책을 논할 때 특히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최일섭 선생님께서 논의해 주신 것은 제가 다시 찾아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정책을 보면 수단형과 합목적형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수단형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합목적형에 근접하기도 한다는 좋은 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정책이 민간차원에서 시작됐기는 했지만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부터 여성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다는 점에서, 가족계획정책은 여성이 등장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었고 그 당시 정책으로 형성되었을 때는 여성의 인권을 회복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여성이 출산자라는데 착안했다는 점에서 저는 우선 수단형 정책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사회 : 이동원>

사회를 잘 못봐서 장선생님에게 충분한 시간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후 종합토론시간에 더 충분한 말씀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 응해주신 장교수님, 또 토론에 응해주신 김교수님, 주교수님, 최교수님 그리고 열심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손봉숙 소장 이하 여러분들 모두 성실하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 사회 : 孫鳳淑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정치학)
- 토론 : 李東媛 (이화여대 교수 · 사회학)
- 李範俊 (성신여대 교수 · 정치학)
- 張必和 (이화여대 교수 · 여성학)
- 崔日燮 (서울대 교수 · 사회복지학)

총회 종합

(會編校集題辭) 總編題辭：位氏 ●

(會編校集題辭) 總編題辭：位氏 ●

(會編校集題辭) 總編題辭

(會編校集題辭) 總編題辭

(會編校集題辭) 總編題辭

〈사회 : 손봉숙〉

지금부터 종합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은 1·2부에서 발표하신 선생님과 사회를 보신 선생님 네 분을 모시고, 주로 방청석에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참석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1부의 사회를 맡아주신 이범준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논의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 2부의 사회를 맡으신 이동원 선생님께서 5분정도 간단히 요약해 주신 다음, 방청석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지난 몇년동안 여성발전을 위한 상당한 법적, 제도적 노력들이 구체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983년 여성문제를 전담하여 연구하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창립을 시작으로, 정부내에서는 정무장관(제2)실이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처로 신설되었고, 전국 15개 시·도에는 가정복지국이 신설되었으며, 1988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30년 숙원이던 가족법도 1989년 말에 개정되는 등 그런대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으나 이러한 법적·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학문적으로도 여성학과가 생김으로써 여성학을 연구하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이 설립되는 것과 같은 눈부신 발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학문적 발전을 바탕으로 적어도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또 다시 남녀평등의 문제를 논하지 않아도 좋은 그러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1990년대의 10년을 슬기롭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오늘의 주제를 「90년대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선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종합토론에서는 여성들이 단순히 국가이익의 수혜자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능동적 선도자·주체자의 한 사람으로서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적어도 21세기에는 구현할 수 있도록 남은 10년을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부의 사회를 맡은 이범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 이범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0년대의 여성과 정치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자는 제도정치, 운동정치, 문화정치라는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90년대 정치에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과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발표자는 ‘누가(who)’라는 문제보다는 ‘어떻게(how)’라는 시각을 강조하면서 남성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가지 자질, 즉 정복적·호전적·경쟁적인 남성들에 비해서 평화적·윤리적이며 섬세한 속성을 가진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발표중에 정치참여의 한 방법으로 지적된 할당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한 토론자는 할당제를 위헌이라 보면서, 남성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당규로 제정할 때는 위헌시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 토론자는 상당히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6공화국에 들어와서 행정부에서는 공무원시험에서 여성차별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도가 30%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행정부에서 말단 내지 하위공무원직에 여성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토론자는 위헌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이 아직도 미약한 상태에 있는 과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 후, 대등단계를 거쳐 상호통합단계로 갈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로 이러한 문제들이 1부에서 다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손봉숙〉

감사합니다. 다음 이동원 교수님께서 제2부의 발표와 토론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 이동원〉

장교수님은 집단간의 불평등 즉 남녀간의 불평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대전제하에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틀로서 수단형과 합목적형의 두 개념을 제시하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수단형적 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소위 가부장제도라고 일컬어지는 전통적 사회질서의 맥락에서 집행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여성정책이 수단형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합목적형 정책의 성격을 띠었으면 좋겠다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여성관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분 토론자는 장교수님이 90년대 여성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개념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었고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었다고 하면서, 다만 그에 대한 분야별 구체적 제안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토론자 중 한 분은 시각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장교수의 논문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지나친 페미니즘적 유토피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입장이라면 정책시행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급진적 변혁보다는 — 급진적 변혁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부작용을 우려해서라도 — 현실에 입각한 점진적·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되,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단형·합목적형이라는 구분은 이론적 틀로서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단과 목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분류될 수는 없으므로 너무 이를 이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본인이 이것을 의도하고 있으면서도 장교수 스스로 이론적 딜레마에 빠지는 결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장교수는 합목적형적 입장에서 여성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단형적 시각에서 문제를 끌고 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는 방법론의 문제로 급진적이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현실에 입각하면서도 의식구조의 변화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목표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 옹호가 필요하

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회 : 손봉숙〉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청중석으로 토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중토론 : 문홍순〉

전국노동조합연맹 여성복지부장이면서 연세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있는 문홍순입니다.

오늘 「90년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면서 참으로 느낀 점이 많았는데, 먼저 참여의 기회를 좀더 넓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좀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여성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리가 비는 문제부터 고쳐야 하지 않나, 즉 여성들이 너무 끈기와 인내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에서 발표하신 한상진 교수님께서 끝부분에 90년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실천 가능한 체계적 이론을 제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여성조직을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 장필화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상 그런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고 느꼈지만, 주준희 선생님의 말씀에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제가 일단 주어졌으면 그 주제를 목적화해서 그 목적을 행동화해야 하는데, 오늘 주제의 경우 여성정책과 공·사영역이라는 주제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실제적인 일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한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필화 교수님께서서는 주로 우리 여성들이 이차적·남성보조적 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우리나라 여성 전문직으로는 무시못하는 직종으로, 세계간호협회 회장도 한국의 김모임교수이고 연세의료원에도 간호사가 1,000명이나 됩니다. 저는 1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남성보조적인 인력으로 활용되는 간호학을 전공한 것을 후회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물론 간호사가 희생, 박애, 봉사 등의 높은 이차적 차원을 가진 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독자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주·종관계 비슷하게 나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성들이 능력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 여성들이 많은데, 섬세하고 따뜻한 여성의 특성으로 환자진료시 효과가 있음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성들을 이차적인 남성보조적 인력으로만 키울 것이 아니라 일차적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준희 선생님께서 단계적·점진적 개선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디서나 그렇듯이 좋은 말씀입니다. 노·사관계에서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단계적·점진적 개선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종류의 안일한 생각은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소극적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일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두 주제를 바탕으로 여기서 함께 느끼신 분들 모두가 이 주제를 목적화하고 이 목적을 행동화하는데 앞장서서 같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발전의 기회도 되고 90년대 여성의 정치참여나 여성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손봉숙>

제가 연구소를 금년 3월에 설립해서 5월에 제1차 「한국여성정치논단」을 열고 오늘이 두번째 논단입니다. 청중애기가 나왔지만, 사실 세미나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인원을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이라서 그런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로 순수하게 해보자는 고집으로 — 동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자 해서 — 자리가 조금 비어 있어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질(質)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꼭 사람이 많아야 좋은 세미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홍보면에서도 제가 속해있는 학회가 한국정치학회이기 때문에 약 900명되는 정치학회 회원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지만 — 물론 그 중 여성은 20명밖에 없습니다 — 정치학회의 남성회원들이 말씀하시기를 매번 초청장은 받지만 부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기가 거북해서 못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꼭 여성만 초청대상으로 삼을 생각도 없었고, 동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신문에 홍보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라고 권고하셨지만, 저는 내용이 좋으면 실어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내용분위로 버터 볼 생각이었고, 사실 그런 식으로 교섭을 하지 않아도 신문들이 홍보를 잘해 주었습니다. 얼마만큼 이런 고집이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자발적인 청중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중토론 : 장정순>

장정순입니다.

장교수님은 합목적적 정책이란 여성의 인간화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이고, 가족계획사업에서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피임실천률이 높아지지 않았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른 접근방법이 시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

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왜 여성의 인간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목적적 계획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상황에서는 딸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합목적형 정책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일 장필화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잘 모르신다면 가족계획사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는 최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중토론 : 방창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방창애라고 합니다.

앞으로 2년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유권자들은 벽보에 붙은 얼굴을 보고 관상으로 찍을 수도 없고, 정견발표라는 것도 원고작성자가 써주는 거니까 듣기좋은 말만 하게 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전부 테스트해서, 이 분이 국회본회의에 몇 번 참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뽑고, 하다 못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까지도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준다면 좋은 정치가를 뽑는 것도 여성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거둘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모니터해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는 주준희 선생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다고 남성에게 종속적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학이 이제 시작단계라 그런지 ‘우는 자식 밥 더 준다’는 식으로, 많이 울어야 국가에서 신경쓰겠지 해서 것처럼 급진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 급진적인 성향은 열등의식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그렇다고 방임하지는 말고 제도권하에서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중토론 : 손덕수>

효성여대에 나가는 손덕수입니다.

오전에 이범준 선생님께서 23~4년전에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였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주 아연실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후, 대망의 2010년이란 해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의 후배들이 남녀평등이란 문제를 가지고 또 몸부림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다루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지위는 개선이 되지만 여성의 지위는 불변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산업사회에서 남녀평등 문제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성도 이제는 지위가 향상되었고 해방되었는데 왜 이렇게들 야단이나, 백년전 할머니 세대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해방이 되었느냐”라고들 말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동시대의 남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성과 백년전의 할머니세대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마치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백년 전에는 형편없었다”는 식의 비교와 같기 때문에 저는 동시대의 남녀가 비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저는 남녀간의 평등문제는 가시적으로는 좀 변화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남녀를 둘러싼 기계문화, 기계문명의 변화, 예를 들면 옛날에 어머니들의 부지깥이 들던 손에 지금은 가스레인지, 바늘 들던 손에 지금은 완제품을 산다든가, 질신 대신 하이힐 신고 다닌다든가, 또 두레박 집던 손에 지금은 수도꼭지를 잡는 정도로 변했지, 여자의 역할은 세가지, 다시 말해 출산의 도구라든가, 노동의 도구라든가, 쾌락의 도구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가부장을 위해서 삼자가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은 한 여자가 세가지 역할을 다하

고 있는 것이 변화입니다. 과연 이것이 여성의 해방인가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난 시기동안 유럽·미국의 여성들은 삼권 — 노동·선거·교육권 — 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했고, 결국 이 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여성들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이 대대로 행해왔던 가사노동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유엔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세계 노동시간의 70%를 여자가 담당하는 반면 전세계 노동임금의 10%만을 여자가 획득하고 전세계 총자산의 1%만이 여자의 몫인 점, 바꿔 말하면 전세계 노동력의 30%만 행하고 있는 남성들이 전임금의 90%를 받고 99%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사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말했듯이 역사와 지구를 움직이는 두개의 노동 — 상품생산과 인간생산 — 중 상품생산은 많은 부분을 남성들이 독점하고 인간생산은 여성들이 전적으로 맡고 있는데, 인간생산은 노동도 아니고 생산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규정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규정때문에 여성들이 지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노동시장에서나 정치계에서나 범조문에서나 여성차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국 여자들은 두 가지 — 하나는 노동, 하나는 성 — 에 묶여있다고 봅니다. 노동을 하면 할수록 여자들은 두가지 측면 즉 비공식 노동과 공식노동에서 저임금을 받습니다. 노동에서의 배제가 성의 소외현상을 가져왔으며 경제권을 독점한 자가 성까지 독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성발전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년 후에도 우리 후배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것입니다.

여성정책에 있어서 저는 과격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국가가 있는가, 우리는 이 국가안의 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성의 전화에도 관계하고 있지만, 5년, 10년, 20년씩 두들겨 매맞은 여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경찰에 이야기해도 사적인 문제라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100만명

내지 150만명의 여자들이 한국남편들을 위해서, 한국남성들에게 성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또 600만명의 임금노동자들 그리고 70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경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는 결론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노동통제를 통한 성통제를 낳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은 자본, 노동을 독점한 사람,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독점한 가부장이나 자본가들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 지키는 것은 좋지만 —,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나의 성을 남성고객에게 팔아야 된다고, 겁탈을 당해도 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당해야 한다고, 여권이 형편없어서 우리의 여식아이들이 태아로서 학살당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수백만명의 여자들이 지금 산부인과에서 학살되고 있습니다 — 하는 것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들이 여성발전을 고민하는 이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늘의 이 자리가 좀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는 국가가 우리에게 레비아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한과 억압과 더 나아가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제일 약자, 이 사회에서의 제일 장애자를 보호, 지원하지 않고서는 이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중토론 : 한인숙〉

이화여대의 한인숙입니다.

어떤 생산양식, 어떤 대립형식 속에서 앞으로의 우리사회가 공존해 가야 된다 또는 인류가 어떤 화합속에서 공존해 가야 된다는 두가지 관점에 보면, 저는 갈등론이나 생산양식 즉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사회는 암담한 사회이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상황에서의 양성이라는 대립의식 보다는 우리가 한 공간, 한 시대에 사는 서로 상호의존하는 인간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각에서 여성들의 문제를 보아나가든 간에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을 조금 더 조화로운 관계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가치관을 함양하거나 여성들을 위한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우선 정책결정하는 기관이라든지 사회제도 자체에서 변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했지만 롤스(Rawls)의 정의원칙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인간적인 차원에서 소외된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원칙이라든지 사회제도를 변혁하는 것은 정부측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기존 세력이나 기존제도에 의해 소외되어 지금은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어떤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느 분이 설명하셨지만 다음 20년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스스로 여성의 협조자라든지 동조자로서 인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만이 사회나 정부도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쪽에서 여성들을 위한 어떤 변혁된 정책, 차등이 있으면 그런 차등을 고쳐 나가는 민주적 방향을 모색해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손봉숙〉

그럼 지금까지의 질문을 한데 묶어 이에 답변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 : 장필화>

지금 어떻게 가족계획정책을 합목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은 사실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농촌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족계획정책이 구체적으로 여성들 개개인에게 상당히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보면, 가족계획정책이 합목적형에 근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근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있는 발언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접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가족계획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딪치는 가장 큰 벽이 남아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인식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의료보험의 혜택과정에서 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도 딸인 경우에는 그 혜택이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는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족계획정책에서 누적된 경험과 문제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가족계획정책이 결과적으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합목적형에 근접했다고 본 것입니다. 최교수님께서 좀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 최일섭>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의 인식이 70년대 말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에 나왔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가족계획 정책이 다른 어떤 여성관련 정책보다도 합목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968년에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만들

어졌던 — 지금은 없어졌지만 — 가족계획어머니회(Family Planning Mothers Club) 입니다. 보건학이나 행정학 또는 사회학 특히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논문과 책들에서 이 문제가 취급됐는가를 알 것입니다. 가족계획어머니회는 우리 농촌에서 가족계획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시각보다는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에 가족계획어머니회가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1960년의 가족계획사업에는 집안의 가사일이나 농사일에만 열중하던 당시 한국 여성들이 뛰어들므로써 농촌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이후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새마을부녀회를 실제로 주도해 나갔습니다. 1978년 새마을운동이 모든 농촌조직을 흡수했을 때 가족계획어머니회는 가족계획부로 흡수, 통합되었지만 사실상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이끌어 갔던 여성지도자들은 전부 가족계획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일반적인 병과 달리 '내 몸에 칼을 대고 멀쩡한 사람이 약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남자건 여자건 간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앞장섰다는 것은 1960년대 우리의 시대상황으로 보아 여자들에게는 대단한 용기였고, 이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가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계획하자고 하면서 수술받게 하고, 또 수술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식이 죽어서 다시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될 경우에 그 비난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웃지 못할 사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책에도 한국 가족계획어머니회의 생생한 기록들이 나온 것을 저도 직접 읽어 보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에서 가족계획사업이 수단형적인 것에서 합목적형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가족계획운동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실상 가족계획운동은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 등 한국의 여성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토론 : 장필화>

사실상 저는 가족계획정책이 대표적인 여성정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가족계획정책이 합목적형이 아니고 수단형인데, 합목적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일섭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족계획정책이 새마을운동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고 결국 여성의 지위향상을 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의 시발점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타자지향적이었다는 점에서 가족계획정책은 합목적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 : 손봉숙>

가족계획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가족계획정책이 합목적형인가 수단형인가의 문제,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토론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수단형 정책으로 시작했던 것도 시일이 경과하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합목적형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급진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것인가 혹은 단계적·점진적으로 개선해 갈 것인가의 문제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융합모델이어야 하는가 차이모델이어야 하는가의 논쟁이 장교수님의 합목적형 정책이어야 하는가 수단형 정책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전적으로 일맥상통하는 논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장교수님이 말씀하신 합목적형 정책은 곧 한교수님이 말씀하신 차이모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여성운동의 좌표, 목표, 방향은 명실상부하게 남녀평등의 실질적 구현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단적인 과정으로 점진적인 융합모델이나 수단형 정책도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

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단형 정책도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지위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좀전에 소비자연맹에서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 기능, 즉 국회의원에 대한 품격 테스트 같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의 여성운동을 보고 제가 한국에서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475명의 하원의원에 대해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어떤 특정 여성정책, 예를 들어 ERA(Equal Rights Amendment)와 같은 것에 대해 — 우리의 경우에는 가족법 개정 — 어떤 의원, 예를 들면 ‘종로구의 모 의원은 가족법 개정 찬성 ○, 또 서초구에서 나온 모 의원은 가족법 개정 반대 ×’와 같은 도표를 만들어 그것을 복사해서 전국 여성운동단체에 보내고 그것을 각 지역에서 받아 보고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여성관련 법안에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를 분명히 유권자가 알고 난 후 이를 그 다음 투표에 반영시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역시 이런 식의 국회의원에 대한 모니터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표를 뽑는 것이고, 올바른 대표를 뽑았으면 내가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지 즉 나를 대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뽑은 사람이 국회에서 내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견제하는 것이 직접 참여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별 의원이 어떤 특정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를 자기 마음대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자유로운 투표 — cross voting system — 가 행해지기 보다는 당이 결정하면 본인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막론하고 당의 의사대로 투표하는 것이 현재의 투표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법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의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Cross voting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명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해 조사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민자당 의원인가 평민당

의원인가를 안 후, 그 당이 특정법안에 찬성했나 반대했나만 밝히면 구태여 일일이 이 사람이 여성정책에 찬성했나 반대했나를 밝혀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럴 수도 없는 무용지물인 것이 현재 우리 국회의 투표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그런 모니터 기능이 크게 효용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정의원의 원내발언이나 대정부질의 등 의정활동상을 모니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하나가 역대 여성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헌국회부터 현재 13대국회까지 40여년 동안의 여성의원수는 42명입니다. 40여명의 여성국회의원들 중에는 전국구, 유평회,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회에 진출하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지역구 출신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여성국회의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원내발언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우리에게 큰 지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언을 하는 것도 본인이 교섭능력을 가지고 높은 사람, 예를 들면 원내총무에게 “이번에 발언 한번 좀 시켜 주십시오 지역구에 가서 얼굴도 좀 내야 되고 하니까” 하는 식으로 교섭을 잘 하는 사람이 발언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원내발언을 얼마나 했는가도 의문이 되고,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느정도는 국회의원의 능력을 재는 지표가 되겠지만 한편으로 그 발언내용을 보면 다분히 지역구용이라는 측면, 즉 사실은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추진하는 것처럼 발언할 때도 상당히 많고, 정부에서 부탁하는 것이나 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 개인의 견해와 다른 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치인 한사람 한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드러내기에는 여러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런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계속 이런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해 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숙 평민당 부총재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중토론 : 박영숙〉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오랫동안 학자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상아탑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족계획사업이 수단적인 정책이었느냐 합목적적인 여성정책이었느냐 하는 것은 학자들께서 판정을 내려주시겠지만 최고수님께서 가족계획사업을 상당히 미화하는 데에는 조금 이론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인구계획정책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 가족계획사업이었고, 가족계획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질 만큼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도 이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지위향상에 공헌한 부분이 강조되었지만 사실상 이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성과위주로 영구불임시술, 임신중절, 피임약 투입 등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불임시술의 경우를 보면, 남자의 시술이 여자의 시술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수의 여자가 불임수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은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치중하였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시보다는 농촌사람들에게 치중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전형적인 수단형 정책이었다는 증거를 들라고 한다면 저는 가족계획사업의 바로 이러한 부분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 사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불임수술에 관해서 후유증을 호소하는 여성이 세계적으로 40%정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단체의 연구결과이지만, 60여%나 됩니다.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 정책으로 된 것이니만큼 그 후유증의 치료에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정부는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임시국회 때 이 문제를 정부에 촉구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정될지는 확실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불임시술 등에서 후유증이 발생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람들은 수술을 받을 때 한

사람당 5만여원 내지는 7만여원이 읍진료소에 지불되었기 때문에, 후유증의 치료도 수술을 받았던 곳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전제하였지만 불임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도시보다는 농촌사람들로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서울가서 살다가 후유증이 생기면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서울 병원에 가면 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강원도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치료받는 돈을 아끼기 보다는 오히려 교통비를 아끼는 것이 더 나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부인이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들은 그것이 불임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잘못에 의한 부인병이라고 하면서 당신 자비로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은 후유증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200만에 가까운 여성들이 이 후유증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과연 합목적적인 정책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피임약 투약을 한다고 했을 경우 피임약은 그야말로 20년이 넘게 사용되어 왔는데 그 20년 동안에 생체검사 한번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지금까지도 투약되고 있습니다. 약을 직수입해서 체질에 맞는지 안맞는지 양이 맞는지 안맞는지도 모른 채 지금까지 무조건 투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가족계획사업이 어떤 법이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자들께서 사실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 감안해서 밑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가지고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 최일섭>

박영숙 부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박 부총재님 못지 않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7년도에 약 8개월동안

가족계획협회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가족계획연구원 측과 우리가 조사의뢰한 측 사이에서 충돌도 있었고, 그 후에도 — 지금은 가족계획사업에서 떠났지만 — 상당기간 동안 자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으로 보면 여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가족계획사업이었다 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가족계획협회에서도 남자가 정관수술을 하는 것이 돈도 싸고 부작용도 적고 복원수술도 가능한,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피임을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보더라도 남자가 하도록 하고 예비군같은 사람들을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여성들이 희생정신이 강해서 그런지, 남편의 몸에 칼을 대느니 내가 대는 것이 낫다는 의식때문에 여성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이 수단형이나 합목적형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구분한다면, 논문에 쓰여진 맥락에서 보아, 그것을 합목적형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임을 밝혀 둡니다.

<회중토론 : 박영숙>

모든 것은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의 경우도 우리 여성들이 희생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술을 받고 후유증을 치료받지 못한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나 무료로 불임수술을 받는다는 것 또는 암검사를 받는다는 것이 기만적인 정책에 의해서 된 것이지 — 물론 거기에 어느 정도 희생정신은 있었겠지만 — 어떻게 남편의 몸에 칼을 대느니 내가 대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들의 희생정신 때문에 여성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 이범준>

오전 1부 주제토론 중에서 어떤 분은 오늘의 여성문제가 60%는 여성의 책임이고 40%는 제도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성이 반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2부 주제토론에서 한 토론자는 고시제도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외시, 사시, 행시 등에 더 많은 여성인력이 참여해서 합격하면, 전체 정부 관료직에 여성이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행정부의 고위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저는 외무부 소관인 외교안보연구원 원장과 간부들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남자를 몇 명 총원하였다고 해서 저는 즉각 반사적으로 그러면 왜 여성은 총원하지 않았느냐 하였더니 그것은 외무고시 합격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년 외시에 여성은 한명도 합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남성을 타하기 이전에 우리 여성이 우리에게 열린 제도적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 1부에서 한교수님이 여성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라는 말씀, 즉 남성도 감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을 위한 identity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여성의 과제라고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한 행시, 외시, 사시는 우리가 정부 각부처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실력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입법부로의 참여는 국회에 우리가 얼마나 진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오늘의 대한민국 정당내에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 정당은 민주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과정이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제도적인 정치 때문에 여성이 입법부에 침투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장식용 — 우리 당은 여성 몇 명에게 할애하였다는 전시용 — 으로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여성 스스로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여성에게는 첫째도 실력양성이요, 둘째도 실력양성이요, 셋째도 실력양성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 김애실>

제가 고시제도를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것을 반박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였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시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학교에서 고시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 고시발전위원회가 생기게 된 이유는, 저희 학교 운동권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총학생회에서 사업으로 내건 것이 학교에서 고시원 건물을 만들고 행정적인 지원과 장학금을 주는 등 모든 것을 완전히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권학생들이 주동하고 있는 학생들 발전위원회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현재의 정치제도를 부정하고 법정에 가서 맹렬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주체들이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또 그런 고시반을 학교정책으로 육성하라는 주장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라고 하였더니 학생들의 주장이 “판사도 비민주적이고 변호사도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민주적인 판사, 민주적인 변호사, 민주적인 검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시제도를 없애라고 주장한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고시를 통해서 법관이나 행정관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고시제로 인한 부작용이 장점보다 더 많다면 고시제는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시제도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즉 관료주의에서 오는 기업과의 관계,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고시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시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 행정관료를 충원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입장에서 고시제를 볼 때, 여성은 실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고시제도는 여성이 공부할 여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시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집을 떠나서 하루 종일 고시원같은 곳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부모가 여학생을 집이 아닌 고시원같은 곳에서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경제학이나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성들을 키워주겠다고 해도, 오는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고시제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장을 현재 제도가 부당하다는 이유의 근거로 하신다면, 운동권 학생들이 민주적인 행정관료나 민주적인 법관을 키우기 위해 고시제도를 지원해야겠다는 식으로, 여성들도 여성들을 위한 고시제도의 지원체제를 만들어 놓고 고시제도에 들어가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손봉숙〉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90년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대토론회를 준비한 저 자신이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여성문제라는 것이 워낙 근원적이고 복잡다단한데다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제 역시 상당히 어렵고 복합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도가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할 것인가, 합목적형으로 할 것인가 수단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하기 보다는, 여성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 쪽으로는 꾸준히 의식을 개혁하면서 동시에 제도적인 개혁도 추진해야 할 것 같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되 단기적인 급속한 변화의 방법도 동시에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성이 9급공무원의 30%를 차지한들 무엇을 할 수 있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 9급공무원은 얼마든지 3, 4, 5급으로 올라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5급공무원의 30%가 여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이 출발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화의 징조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 단기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동시에 취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범준 선생님께서 첫째도 여성실력, 둘째도 여성실력이라고 하셨는데, 여성 혼자서 실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 과제가 역시 너무 벅찬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성이 먼저 실력을 배양해야 하지만, 그것을 살려 줄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분위기나 여건, 제도 같은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이 궁극적으로는 합목적형 정책에 초점을 두고 설정되어야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단형 정책도 사양하지 말고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려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상진 교수님이 주장하신 남녀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차이모델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남성위주의 제도에 융합해 나가는 모델도 부분적으로는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든지 다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는 그만큼 여성문제가 복잡하게 서로 맞물려 있고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에는 벅찬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로 결론을 삼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정무장관(제2)실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0년대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